

2021년 정부 업무계획(고용노동분야) 주요 내용

1. 2021년 정부업무계획 주요 내용

가. 2020년 업무 추진 실적 및 성과

- 시장주체의 긴급 수요에 맞추어 거시경제 정책을 제정·시행, 경제회복상황이 기대치를 상회하였고, 경제성장율 2.3%를 실현함.
 - 6온(穩) 업무에 기반하여 6보(保) 임무를 명확히 제시함. 특히, 취업, 민생보장, 시장주체에 대한 보장업무를 중점 추진(취업안정·보장을 6온, 6보 업무의 최우선에 배치)
 - ※ 6가지 안정: 취업, 금융, 외자, 무역, 투자, 예측 안정
 - ※ 6가지 보장: 취업, 기본민생, 시장주체, 식량에너지 안전, 산업사슬·공급사슬 안정, 기층운영 보장
 - 일자리 창출·유지의 주체인 시장주체(특히,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와 활력 제고를 위해 사회보험료(양로, 실업, 공상보험) 1.7조 위안 절감을 포함한 2.6조 위안 상당의 감세, 비용인하(減費) 실시
 - 사·현 정부에 2.6조 위안의 직접재정지원과 대출규모 확대 및 금리인하, 원리금 상환유예 등 1.5조 위안 상당의 금융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및 주민에 실질적 혜택 부여
 - 특별열차 등을 편성, 농민공에 대한 점대점 지원을 통해 기업의 조업 재개를 지원
- 취업안정과 민생보장을 우선시하여 인민생활을 확실하게 보장, 도시지역 신증취업자수(新增就業)는 1,186만명(목표 900만명), 2020.12월 도시지역 조사실업률은 5.2%(목표 6.0% 내외)로 하락함.
 - 취업은 최대의 민생으로 시장주체를 보장하는 것은 취업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인식하에
 - 각지에서 일자리 안정 및 확충 노력 강화, 노사가 공동으로 어려움 극복 노력, 농민공, 대졸자 등 중점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강화, 대중창업 및 만민혁신을 통한 취업 견인 등 추진

- 특히, 빈곤노동력의 일자리 안정과 취업을 우선적으로 지원, 귀향빈곤 노동인력에 대한 재취업 및 임금소득 안정에 역점. 이를 통해 연말 마지막 남은 농촌 빈곤인력 551만명 및 51개 빈곤현이 모두 탈빈곤 실현
- 실업보험 적용확대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봉착한 주민의 최저생활 보장
- 이 외에도 직업대학(高職院校) 학생 100만명 확대 모집 목표 달성, 양로 보험 적시지급 및 양로보험기금 성급 통합수지 실현, 제7차 전국인구전면조사 실시(2020.12월), 생산안전사고 방지 및 처리 강화 등 추진
- 그러나,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여전히 확산세 지속, 국제정세 불안정 및 불균형 요소 확대로 국제정세는 복잡하고 심각한 실정
- 또한, 국내적으로도 방역사업에 여전히 취약점 존재, 경기회복의 기초 미흡, 주민소비는 여전히 제약
- 투자과 성장을 지탱하는 저력 부족,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 자영업자는 비교적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취업안정도 큰 압력을 받고 있음.

나. 13.5 계획 시기 주요 성과 및 14.5 계획 시기 주요 목표 및 과제

- 13.5계획(2016-2020) 시기 고용노동 분야 주요 성과
 - 국내총생산이 70조 위안 미만에서 100조 위안으로 증가
 - 5,575만명의 농촌빈곤인구 빈곤탈피 실현, 960여만명의 등록빈곤인구(建檔立卡貧困人口)도 이주를 통한 빈곤구제 실현
 - 1억 명의 농업이전인구(農業移轉人口)와 기타 상주인구를 도시호적에 가입시키는 목표 실현(도시 노동력 확충)
 - 주민생활 수준의 가시적 향상과 도시지역 신규증가취업자수가 6,000만 명을 초과,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회보장체계 구축
- 14.5계획(2021-2025) 시기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첫 번째 5년으로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 새로운 발전이념에

따른 발전전략을 신속히 구축,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할 필요

○ 14.5 계획 시기 고용노동분야 목표 및 주요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음

※ 국무원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건의안에 따라 『국민경제사회발전 14.5계획 및 2035년 장기목표』 초안 작성 → 향후 전인대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

- 각 방면에서의 발전의 질과 효율의 제고에 두고, 성장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촉진

- 경제운영이 합리적 구간에서 유지되도록 하고, 실제 상황에 맞추어 연도별 경제성장 기대목표를 제시하되, 항상 노동생산성 성장률이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초과하고, 도시지역 조사실업률은 5.5% 이내로 통제

- 생산요소(인력 등)의 합리적 유동을 제약하는 장벽 타파, 빈곤퇴치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농업이전인력의 시민화(호구제도 개혁)를 통해 상주인구의 도시화율을 65%로 향상

※ 2019년 전체 인구대비 도시인구의 비중은 60.6%로 이를 2025년까지 65%로 확대할 경우 매년 1천만 명 이상의 농촌인력의 도시 유입이 필요(SCMP 3.7자 보도 참고)

※ 호구(戶口)제도 개선 주요 내용

- 도시 규모별 호구제도 개선 : ① 300만 미만 도시 : 전면 완화, ② 300만 이상 500만 미만 도시 : 단계별 완화, ③ 북경, 상해 등 500만 이상 도시 : 마일리지(積分) 제도 운영을 통해 도시 서비스 차등 부여(마일리지는 취업기간, 사회보험료 납부실적, 교육수준, 자격증 보유 등에 따라 부여)

- 교육, 의료, 취업, 사회보험 등 기본서비스는 호구제도 개선과 상관없이 호구 지역에 상관없이 거주지 또는 취업지에서 평등하게 부여

- 취업우선정책의 지속적 실시를 통한 일자리 총량 확대,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을 통한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을 국내총생산과 동반성장 추진

- 생산연령인구의 평균 교육연한을 11.3년으로 확대하고, 인구노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전략을 실시하고, “1노1소(一老一小)”를 중점으로 인구서비스체계 보완, 출산이 적정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며 법정 퇴직연령을 점진적으로 연장

- 다층적 사회보험 보장체계를 완비하고, 기본양로보험 가입율을 95%로 높이며, 사회부조(救助)제도와 자선(慈善)제도를 최적화
- 안전생산 등 공공안전보장능력 전면적으로 향상

다. 2021년 중점 업무

- 올해는 14.5계획 첫해로 중국 현대화 건설과정에서 특수한 중요성을 갖는 첫해로 금년도 고용노동분야 주요 거시경제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올해 경제운영의 회복 상황을 고려하여 경제성장률은 6% 이상 달성
 - 도시지역 신규증가취업자는 1,100만명 이상 실현, 도시지역 조사실업률은 5.5% 수준으로 통제
- (재정지원)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질과 효과성을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되, 코로나19 사태가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경기회복 상황을 반영
 -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율을 지난해 3.6%에서 3.2%로 인하, 방역 관련 특별국채는 추가 발행하지 않으나, 재정지출 규모는 확대하며, 지출은 취업, 민생, 시장주체에 대한 보장을 높이는데 초점
 -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은 확대하고, 시, 현 등 기업과 주민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 소규모 납세자의 증치세 기초공제기준 확대(10만 위안 → 15만 위안) 등 조세감면, 대출 원리금 상환연기, 용자담보비용 인하 등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정책 지속 실시
- (취업우선 정책 지속 강화) 기존 일자리 안정 및 새로운 취업 통로 확대
 - 인원을 감원하지 않거나 적게 감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계속 재정세제, 금융 등 정책적 지원 제공
 - 실업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계속 인하하고, 실업보험 반환 등 임시적(段階性) 일자리 안정정책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현장작업식 교육훈련(以工代訓) 실시정책기한을 연장
 - 시장을 통한 취업경로를 확대하고, 창업 촉진을 통해 취업을 견인

- 취업의 걸림돌인 장벽을 낮추고, 국가직업자격목록을 동태적으로 관리하며, 일부 진입허가류(進入類)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근무연한)을 폐지하거나 완화
- 신취업형태(예 : 플랫폼 취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규범화하며, 산재보험 적용 시범 사업을 조속히 실시
- 유연취업자(靈活就業, 자영업자, 4시간 미만 非全日制, 신취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지속 실시, 취업지에서 사회보험 가입 관련 호적규제 철폐
- 대졸자, 퇴역군인, 농민공 등 중점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및 장애인, 제로취업자 가정(零就業家庭) 구성원 등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지원정책 보완, 실업자 재취업 촉진
- 직업기능훈련자금의 사용범위를 확대, 대규모, 다차원의 직업기능 교육 훈련 전개 등을 통해 직업기능 향상과 직업대학 학생 확대 모집 3개년 목표를 달성, 일련의 고급기능인재양성기지 건설
- 취업서비스품질향상 프로젝트를 실시. 취업특별보조금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노동시장, 인재시장, 일용직시장 등을 구축하여 취업경로를 확장

○ (내수 확대 및 향촌 진흥 전략 부문)

- 소규모 가게와 점포(小店商鋪) 등 대중편의 서비스업의 질서있는 운영을 보장
- ※ 리커창 총리는 2019년 소점경제, 2020년 노점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강조
- ‘인터넷+“를 활용한 새로운 경영형태(플랫폼 경제)와 모델 발전, 플랫폼 경영업체에 대한 서비스 요금 합리적 인하
- 빈곤퇴치 인구의 안정적인 취업을 촉진하고 그들에 대한 직업기능훈련 강화, 빈곤퇴치 지역의 산업발전과 타지방 이주 인원에 후속 지원 강화, 농촌의 저소득층 인구에 대한 계층별, 유형별 상시화 지원을 강화

하여 재빈곤 발생 억제

- 농민공 임금의 적시 전액 지급 보장, 향촌 산업을 서둘러 발전시키고, 현단위 경제를 크게 발전시켜 농민의 취업경로 확대
- (교육, 사회보장 등 민생복지 증진 및 사회거버넌스 부문)
 - 직업교육의 적응성을 강화하고, 산업과 교육의 융합, 학교와 기업의 협력을 강화하며, 직업기능등급증서제도를 깊이 있게 실시
 - 도시 진출 노무인력의 자녀 취업 문제 개선, 중서부 및 농촌 지역 출신자에 대한 대학 입학 확대 등 교육의 공평성 향상
 - 정년퇴직자의 기본양로금 표준을 상향, 양로보험 기금의 전국 통합 추진, 개인(第3支柱)양로보험제도 제도화 및 발전 촉진
 -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회보험 공공서비스 플랫폼 보완
 - 실업보험 보장 범위 확대 정책 지속 실행
 - 장기 간병 양로보험 제도 시범 추진
 - 사회조직, 인도적 구조, 자원봉사, 자선사업의 발전 지원
 - 안전생산책임제를 보완, 구체화하며, 안전생산특별정비3개년 계획을 충실히 수행하여 중대사고와 특대(特大)사고의 발생을 철저히 억제

2. 관찰 및 평가

□ 2021년 경제성장을 및 취업 목표

- 중국 2021년 정부업무계획에 시장의 전망과 달리, 올해 경제성장을 목표치를 6.0%대로 낮게 설정한 반면, 취업목표는 코로나19 이전 2019년 수준으로 높게 설정
- 경제성장을 목표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할 경우, 양적 확대에 따른 부동산가격 상승 등 버블 형성, 정부 부채 확대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

- 리커창 총리는 양적 성장보다 오히려 개혁과 혁신을 통한 질적인 성장에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임을 천명(2021.3.5. SCMP 참조)
- 취업 문제는 민생의 기본으로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중점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임.
-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신증취업자수는 1,186만명을 달성하였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올해 취업목표도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판단

《최근 3년간 취업 목표 및 성과》

연도	도시지역 신증취업자수		도시지역 조사실업률	
	목표	성과	목표	성과
2018년	1,100만개	1,361만개	5.5%	4.9%(12월 5.1%)
2019년	1,100만개	1,352만개	5.5%	5.3%(12월 5.2%)
2020년	900만개	1,186만개	6.0%	5.6%(12월 5.2%)*

* 2020년의 경우 2월만 6.2%, 나머지는 6.0% 이하

- 다만, 아직 중국 경제가 회복 단계이고, 시장상황도 복잡하며, 대내외적인 불확실성과 도전이 많은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취업에 대한 압력도 여전할 것으로 전망

※ 2021년 도시지역 신규 진출 노동력 규모는 대졸자 909만명을 포함하여 1,5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2.26,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장관 언론 브리핑)

□ 시사점

- 중국 정부는 올해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력 감소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년연장, 모성보호 확대 등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라 기업 부담이 늘어날 전망
- 인구 구조의 변화와 소득수준 향상 등에 따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도 가속화되어 직종별로 숙련기술인력 등 인력채용에 있어 어려움도 가중될 전망

- 또한, 올해는 지난해 실시된 사회보험료 감면, 증치세 감면 등 조세감면제도의 상당수가 더 이상 실시되지 아니하고,

- 최저임금 인상 등 임금인상 압박이 가중되며, 노동 관련 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21.2월 현재, 흑룡강성, 강서성, 섬서성 등 3개 지역이 최저임금 인상

- 산업안전(안전생산) 및 직업병 관련 법제도 강화 및 법 집행이 엄격해짐에 따라 인사·노무 분야 기업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